

예고된 실패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재단법인 **광장**

Agora Issue Briefing (제 14호)

전문은 광장 홈페이지(www.agora4u.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임 작성 조상호_ 재단법인광장 연구실장

재단법인 광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 B/D 401호

Tel. 02-780-6616 / Fax. 02-780-6618

SUMMARY _ 요약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맹신한 결과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엘리트 중심’, ‘효율 지상주의’ 정책은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0교시 금지 등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08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만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교육 시장의 폭발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학교 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를 귀족학교로 전환시켜 평준화 제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대입 위계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 중에서도 100개교 설립을 목표로 한 ‘자율형 사립고’는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섭 배제와 함께 상위 15%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부자 내각’ 등 특권층을 위한 ‘부자 감세’ 91.6조원은 교육 예산에도 파국적 영향을 미쳐 '09년 1.8조원, '10년 3.5조원 등 5년간 총 14.4조원의 교육 예산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년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선거용 교육 구호’ 들은 이제라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토 작업을 통해 걸러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학벌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연구재단 광장의 Agora Issue Briefing >

진보적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연구재단 광장은 2008년 4월부터 격주로 중요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Agora Issue Briefin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중요 정책들의 동향과 의미를 분석하는 Agora Report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Agora Issue Briefing 제15호는 ‘최근 고용동향과 이명박 정부의 실업대책 평가’라는 주제로 3월 중순 발간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광장 회원들에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대타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압축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예고된 실패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년 평가

Contents

I. 문제 제기	06
II.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 교육의 시장화와 탐욕의 제도화	07
1. 무한 경쟁시대의 개막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2. 목표와 수단의 전도(顛倒) : 획일화, 폭력화, 이념화된 자율과 경쟁	
3. 잘못된 진단과 어긋난 처방 : 사교육 시장의 만개(滿開)와 사학의 부활	
III. 예고된 실패 :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전망	22
1. 최악의 재정적자 : 지방교육재정의 붕괴 가능성	
2. 학벌구조의 공고화를 초래할 2010년 교육감 선거	
IV. 결론 및 제언	27

I. 문제 제기

- '08년 고교 진학률 99.6%, 대학 진학률 83.5%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 초·중등교육의 양적 평등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①소수 명문대의 사회적 독점 현상의 공고화, ②사교육비의 팽창과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의 심화**, ③교육의 **사회적 통합기능의 취약성** 등 교육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교육 현장의 '경쟁과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시장화와 획일화된 경쟁지상주의의 만연**이라는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2.23)에서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재 양성”이며 인재란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 튼튼한 체력,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지난 1년간의 갈등과 정책 혼선을 외면하는 인식을 보여줌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빚어진 교육정책의 혼선은 한 마디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무책임한 처방**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평가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교육 서비스 시장을 자율화·효율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맹신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과 대입제도 운영의 민간 이양과 같은 **무분별한 자율화 조치**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같은 **교육체계의 서열화 추진**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도 우리의 교육환경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킬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것임
- 다음에서는 초·중등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 교육의 시장화와 탐욕의 제도화

1. 무한 경쟁시대의 개막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 인재과학부의 등장과 「4·15 학교자율화」조치의 강행¹⁾

- '08년 1월 16일, 인수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인재과학부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여 이명박 정부의 '엘리트 중심' 교육관과 효율만능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나라당의 반대로 인재과학부 개명은 추후 포기)
- 또한 인수위는 '경쟁과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교과부의 대학입시 기능을 사립대 중심의 대교협으로 이관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영어 몰입 교육' 계획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발표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된 주요 내용(29개 지침 즉시 폐지)〉

지침명	주요 내용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수업 만족도 정기조사 및 결과 반영, 담당교원 업무 경감 등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성적 부풀리기 대책으로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등을 규정
학사 지도 지침	강제적·확일적 보충수업금지, 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 금지('04.2)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및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차원 안내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절차와 비리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요청
시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시설기관 모의고사 참여금지, 민원발생시 감사 및 엄중 처벌 등
촌지 안주교 안받기운동 계획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 지도점검 및 평가 반영
교복공동 구매지침	교복 공동구매, 착용여부, 시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09년 4월 15일.

1) 탐욕의 제도화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쓴 말이다. 김용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회적 강자들의 무절제한 욕망을 배타적으로 반영'해왔으며 '학교와 대학을 통해 세대 간에 안정적인 계급(층) 재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라는 부자들의 요구가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용일, '탐욕의 제도화와 교육의 계급(층)화', 프레시안, '09년 2월 18일.

- 3월 20일, 교육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설치 등 **입시경쟁을 본격화**하는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

- 결국,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권**(초중등교육법 제7조) 등 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고 주요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한편, ①**우열반 금지**, ②**사설 모의고사 금지**, ③**교복 공동구매** 등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각종 제한규정들을 폐지

□ **평준화정책의 무력화와 초중등교육의 위계화(位階化) 추진**

-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기존 평준화정책(고교 무시험 전형)의 근간을 허무는 한편,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한 각종 제한 규정들의 폐지 이후 각급 학교는 학업능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학생간의 경쟁 구조 확산**에 집중

- 그동안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으로 주목받았던 '방과후 학교' 도 점차 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으로 몰락**. '08년 6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국·영·수 세 과목이 개설된 비율은 고교 53.2%, 중교 42.1%, 초교 28.3%²⁾에 달함

* 울산의 한 중학교는 '09년 3월부터 국·영·수 등 5과목의 교과반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 수업시간은 주 5일 15시간(월 60시간)으로 오후 6시~8시35분까지 3교시(각 45분)로 진행하며 수강료는 9만6000원으로 시설 학원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

- **모의고사 실시** 학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08년 8월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한 고등학교는 703개로 '07년 369개교 대비 91% 증가. 더구나 모의고사를 4회 이상 실시한 학교는 '07년 5.4%에서 '9.8%로 증가³⁾

2) 김영진 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현장과 사교육 변화에 대한 연구", 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

3) 안민석 의원, "학교자율화 이후 사설모의고사 폭발적 증가",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년도 방과후 학교 교과강좌 과목별 개설 현황〉

(단위 : 개,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전체	국어	영어	수학
강좌수	90,619	6,824	11,900	6,974	54,172	5,849	9,182	7,823	85,548	14,474	15,558	15,480
비율	100.0	7.5	13.1	7.7	100.0	10.8	16.9	14.4	100.0	16.9	18.2	18.1
		28.3				42.1				53.2		

* 자료 : 김영진 의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현장과 사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 8월 26일에는 군 단위에 명문고 1개씩을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82개소⁴⁾를 선정하고 중학교 입시 부활을 초래할 국제중 2곳의 설립(10. 30)도 승인하는 등 초·중·등 교육체계의 위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 '08년 7월, 특목고는 9개 분야 132개교에 학생 수는 8만 863명(4.2%)이며 명문대 입시에 유리한 과학, 외국어, 예술, 국제고는 78개교에 45,994명(2.4%)임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08. 7월 기준)〉

구분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
학교수	22	10	5	2	20	30	24	15	4	132
학생수	24,901	2,815	2,478	1,234	3,451	25,510	15,988	3,441	1,045	80,863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고교 수는 2,190개교(1,906,978명)이고 인문계는 1,493개(1,419,486명), 전문계는 697개(487,492명)임

- 입시 명문고 250개를 추가로 선정하는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기존 인문계, 전문계의 구분은 '특목계(15%)-인문계(53.1%)-전문계

4) 이명박 정부의 기숙형 공립학교는 내용상으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 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선정된 학교의 75.6%는 기존에 우수고로 선정되었던 학교들을 재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목표가 차별의 공고화와 무한 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31.8%)’로 전환되고 입시 전문 특목고 약 330개의 25만여명(입학정원 83,700여명⁵⁾)을 정점으로 한 위계구조가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⁶⁾

□ 일제고사 조작 파동과 교육정책의 대혼란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 14일에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시험**(전국 초 6·중3·고1)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표본(5%) 추출 방식**을 전수 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체 성적을 공개(2.16)하여 **지역별, 학교별 서열구조의 공식화**를 시도
 - 이러한 정부 방침에 서울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결과를 '09년 3월 학교장과 교원의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별 경쟁 체제 확산**에 적극적으로 호응
- 하지만 입실 교육청의 **통계조작 의혹**(2.17)으로 시작된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운동부 학생들의 응시 제한, 특수학교 제외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성적 부풀리기를 위한 각종 부정행위들의 적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제고사를 거부한 7명의 교사를 파면하고 예정에도 없던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공개하면서까지 **‘하향 평준화’의 폐해를 입증**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음
 -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평가 결과의 발표와 그 성과를 교원인사 등에 연계한다는 교과부의 방침은 결국, 시험 위주, 평가 위주의 학교 현장을 더욱 비교육적이고 서열화된 구조로 내몰게 된다는 것임

5) 머니투데이, '08년 8월 28일.

6)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가 야기할 교육의 차별화 현상과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석은 성기선의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제6호)를 참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년의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세부 내역
'08.1.16.	- 교육인적자원부, 인재과학부로 개편 발표	- 시민사회와 여야정당의 반대로 좌절
1.22.	-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발표 (인수위원회)	- 대학입시 교육 대교협 이관
1.30.	- 영어공교육 완성 로드맵 발표	- 영어 몰입교육(철회), 영어전용교사 도입
2.29.	-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취임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3.20.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업무 보고	- 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추진
4.15.	-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 발표	- 교과부 권한 지방 이양, 0교시규제 폐지
4.24.	- 교육규제 개혁방안 발표	- 182개 지역교육청 폐지 추진
6.10.	- 김도연 장관 사퇴(1기 내각 사퇴)	- 모교 장학금 지원 등 논란 확산
7.7.	-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발표	- 마이스터고 20개 지정 추진
7.30.	- 서울시 교육청 공정책 직선 교육감 당선	
8.6.	- 안병만 2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취임	
8.7.	-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마련	- 학사일정, 예결산, 학습결과 등 게시
8.26.	-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82곳 선정	- 1개군, 1개 명문고 지정으로 서열화 우려
10.2.	- 마이스터고 9곳 선정	- 전문계고 차원의 서열화 조장 우려
10.14.	- 전국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실시	- 표집(5%) 고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
10.28.	-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 방과후학교의 보충수업화 논란
10.30.	- 서울 국제중학교 2곳 신설 확정	- 중학교 입시 부활에 대한 우려 급증
10.30.	-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	- 교과부가 승인한 교과서를 수정 강요
11.6.	- 교원평가법안 국회 제출	-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반영 문제 논란
11.18.	- 교과부·교원노조 단체협약 해지	- 불필요한 이념논란 강화
12.11.	-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 유보	- 교육세 폐지에 따른 재원조달 불투명
12.16.	-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발표	- 5년간 17조원의 교육재정 투자
12.18.	- 영어교육정책 추진방향 발표	- 한국판 토플(국가영어능력시험) 도입
12.27.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보고	- 교육행정 인턴 등 일자리 5만개 발표
'09.1.20.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취임	- 고교다양화300등 정책입안자 복귀
2.16.	- 일제고사 성적 발표	- 서울시 교육청 교원인사에 반영 추진
2.19.	- 일제고사 성적(학업성취도) 조작의혹 대두	- 전국적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추진
2.23.	- 이명박 대통령 9차 라디오 연설	- 일제고사 전국 실시 고수
2.23.	- 일제고사 조작 관련 교과부장관 사과	- 제도 개선후 지속 실시 천명

2. 목표와 수단(顛倒) : 획일화, 폭력화, 이념화된 자율과 경쟁

□ 교육의 차별화 요구와 수월성 개념의 왜곡 : 경쟁 만능주의의 강화

-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쟁 만능의 입시교육’ 이면에는 교육기회의 양적 팽창 완료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기회의 질적 차별화 요구가 존재⁷⁾
- 우리나라 중학생의 고교 진학률은 이미 '96년에 99%를 넘어 교육 기회의 사실상 완전 평등에 도달. 대학 진학률도 '88년 35.0%에서 '98년 64.1%, '08년 83.8%⁸⁾로 급성장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학력사회에 진입

〈우리나라 학생의 취학률과 진학률〉

(단위 : %)

연도	취학률				진학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초교→중교	중교→고교	고교→대학
1988	97.8	84.3	67.4	22.2	99.5	93.5	35.0
1998	97.7	94.1	88.7	46.8	99.9	99.5	64.1
2008	99.0	93.2	90.0	67.2	99.9	99.7	83.8

* 자료 : 통계청, 「2008 한국의 사회지표」, '09년 2월 20일.

- 반면 소위 SKY대학 등 극소수 대학의 고위직 점유율 등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공고화됨에 따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SKY대학은 차관급 이상 관료(143명)의 70.5%, 고위공무원단(1,480명)의 46.9%, 국가인재DB(15.8만명)에 등록된 주요 인사의 36.9%를 차지

7) 성기선,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이슈브리핑 제6호)」, 재단법인 광장, '08년 6월.

8)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도 급성장하여 '00년 42.0%(일반계 83.9%)에서 '07년 71.5%(일반계 87.1%)에 달했다.

- 한편,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비율은 급감**(’96년 68.5%→’07년 58.0%)하고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8.41배(’08년)로 벌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 이는 **소득 계층간 교육비 지출 격차**로 확산되고 있음

* ’08년 기준 소득 상·하위 10%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은 9배 차이.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과 500만원 초과 가정 학생간 수능점수는 약 30점의 차이가 발생

○ 이처럼 교육기회의 양적 팽창 완료와 소득격차 확대는 사회의 **학벌구조와 결합**하여 ‘교육기회의 질적 차별화’ 요구로 분출되고 있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월성 개념을 왜곡하고 차별화·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추구**

- 최근 대다수 선진국들은 ‘학생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서 수월성(秀越性, Excellency)을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excellency for all)’ 개념을 중시⁹⁾

- 반면 한국사회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목적으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¹⁰⁾을 제시한 것처럼 **영재교육** 또는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특화교육**으로 수월성 개념을 축소하여 평준화 교육의 대척점으로 활용

○ 이명박 정부는 획일화된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화·자율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고 강조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편 없이는 또 하나의 입시 명문고 육성정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

* ’90년 ‘어학영재’ 양성을 명분으로 외국어 고등학교가 도입 되었지만 동일계열 진학 제한 폐지, 설립허가권의 시도교육청 이양, 비교내신제 폐지 등 결국 명문대 입시에 불리한 각종 규제를 철회하면서 사교육 팽창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9) 최민선, 「경쟁교육, 귀족교육 이 MB식 ‘수월성 교육’?」,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8년 11월 5일.
 10)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정·운영 - 질의·응답(Q&A) 자료」, ’08년 12월 29일.

- 결국 이처럼 왜곡된 수월성 개념에 기초한 경쟁위주의 초·중등정책은 이 명박 정부 등장 이후 ①학생 개개인의 **학력 평가**에 대한 과도한 집착, ②**영어 교육에 대한 몰입현상**, ③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무절제한 교육자율화** 추진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획일화, 폭력화되는 1%의 자율과 경쟁

- 교과부는 지난 1년간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제, 학력평가·학교정보공시제의 시행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 기반’을 마련¹¹⁾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실상은 **획일화, 폭력화, 이념화되는 시장만능론과 경쟁지상주의**의 대두임

-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분류하겠다고 추진한 '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는 임실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결과 조작과 운동부 등 학력부족 학생의 결시 유도 의혹 확산** 등 대혼란을 야기

- 이 과정에서 학업성취도 실시를 거부한 7명의 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로 교육청과 전교조, 시민사회 등 **교육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그러나 교과부는 이러한 외중에도 소위 ‘귀족학교’로 불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30%에서 **50%로 완화**하고 불과 3년만 외국에 체류하면 입학 을 허가 하는 등 **1%의 상류층**을 위한 각종 **특혜조치**는 무제한 허용

-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 입시 부활을 가져올 국제중학교 2곳을 숲한 논란 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09년 3월 개교를 확정지음. 또한 서울 시는 합리적인 선발방법의 마련은 도외시한 채, 모든 초·중학교에 **1개 이상의 영재학급**을 신설하여 초중고생의 0.4%(5,624명)인 영재교육 대상자

11) 교육인적자원부, 「2009년도 업무보고자료」, '08년 12월 27일.

를 '10년까지 1%로 늘리고 '12년 이후에는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사교육의 폭발을 유도

- '10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되는 유·초등학생을 위한 반포외국인학교는 운영자로 영국의 사립학교인 '덜위치 칼리지' 를 선정하고 1년 학비를 유치원 2천6백만원, 초등학교는 3천만원으로 결정('08.11)

□ 이념에 물든 실용주의 : 역사교과서 논란과 개혁(保革) 갈등

○ 또한 좌편향된 역사교육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정책은 보수인사의 역사 특강, 건국 60년 홍보물의 4·19 격하, 역사교과서 수정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 특히 '02년 교육부의 자체 검정을 거쳐 6년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은 교과부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폐쇄성과 교육철학의 부재를 드러냄¹²⁾

- 더구나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립적인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은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입장에 맞추어 교과부가 직접 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4항)을 직접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문제의 재발 가능성까지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임

12)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의 문제점은 홍순권, '한국 근현대사의 인식과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계간광장 제2호(2009년 신년호), 재단법인 광장, '09년 1월호를 참조.

3. 잘못된 진단과 어긋난 처방 : 사교육 시장의 만개(滿開)와 사학의 부활

□ '07년 기준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가계소비지출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의 77.0%가 사교육에 참여,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10.2시간¹³⁾에 이르는 등 파국적 상황임

○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학교교육 만족,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고교 다양화 300’으로 3.5조원, ‘영어 공교육 완성’ 7조원 등 매년 10.5조원의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선공약〉

구분	주제	세부 내역
주요 내용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 운영 -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7조원)를 절반(3.5조원)으로 감축 - 자율형 사립고(100개)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로 2천5백억원 감축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 교사 3,000명 확충,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확대 - 영어 사교육비(14조)를 절반(7조원)으로 감축
	3단계 대입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7과목 → 4~6 과목) - 3단계 : 완전 자율화 (본고사 배제)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 :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 - 바른 인성 책임제 -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 -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 -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 (교원평가 입법화) -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U-러닝 체제 확립)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 자료 : 한나라당 홈페이지, 17대 대선 공약 설명자료.

13)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 경감 대책」, '08년 10월 28일.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따라 '08년 전국 가구의 실질 소득이 0.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8.0% 증가, 더욱이 사교육비 (입시·보습학원비)는 17%(도시가구는 24.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¹⁴⁾

-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의 보충교육비는 '08년 2/4분기에 사상 최초로 월평균 20만원을 넘었으며 3/4분기에는 22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급등¹⁵⁾

〈전국가구의 유사 사교육비 추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2008	2007	증감율	2008	2007	증감율	2008	2007	증감율
보충교육비	16.2	14.5	11.8%	17.6	15.8	10.9%	18.0	15.6	15.1%
학원 및 개인 교습비	15.0	13.4	12.1%	15.6	13.9	11.7%	16.5	14.3	15.5%

* 자료 : 진보신당, 「별년 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 '09년 2월 24일.

- 또한 소비자 물가가 4.7% 인상된 것에 비해 교육물가는 5.4%가 인상되었으며 학원비는 대입종합 7.0%, 보습학원 6.5%, 고입종합 6.1% 순으로 인상

〈교육물가 인상률〉

구분	납입금			학원비					보육시설 이용료
	유치원	전문대	사립대	대입 (종합)	대입 (단과)	고입 (종합)	고입 (단과)	보습	
인상률	8.5%	7.5%	7.1%	7.0%	6.1%	6.1%	4.8%	6.5%	7.0%

* 자료 : 진보신당, 「별년 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 '09년 2월 24일.

14) 통계청,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09년 2월 27일.

15) 최민선, 「교육대란은 올 것인가... '죄수 딜레마'에 갇힌 한국교육의 3대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년 1월 16일자.

- 반면에 사교육 최대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전년 대비 매출액이 23.8%(2,023억원), 영업이익은 15.7%(675억원)이 늘어나는 등 7대 주요 사교육업체의 '08년 매출 총액은 2조 1,366억원으로 전년 대비 9.24%가 폭증한 것처럼 사교육 시장은 급팽창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소상공인 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부동산중개 16.9, 소매업 34.9, 음식업 43.8 등 최악의 지표를 보여줌에도 학원업은 58.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결국,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만 아니었다면 이미 '08년 하반기부터 사교육 시장은 폭발하였을 것임. 사교육 팽창의 원인을 '하향 평준화'로 오진(誤診)한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교육의 폭발을 야기할 것임

-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어긋난 처방은 '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아니라 '교육 불만 두배, 사교육비 두배'의 길을 가고 있음

□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을 가져올 가장 위험한 정책은 「고교 다양화 300」이고 그 중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가 본격화되는 '09년은 '공교육 재앙의 원년'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08년 12월 30일에 입법 예고되었으며 '09년 30개, '10년 30개, '11년 40개 등 100개교가 설립될 예정임

○ 최종적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100개교가 되는 '11년에는 기존의 특목고와 기숙형 공립고 150개를 포함한 330개의 사전 선발 고교가 등장하여 전체 고등학교 2,190개교의 15%(입학정원 83,700여명)를 차지하게 됨

* 평균적으로 이들 사전 선발(전기 모집) 고등학교는 1차 합격자를 정원의 4~5배 모집, 결국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75% 이상이 '귀족학교' 진학을 준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

- 또한 이들 학교는 ①건학이념의 실현, ②학교 선택권의 확대, ③전문 인력의 양성, ④자율화된 수월성 교육 실현 등 수많은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영어·과학 영재를 포함한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됨 고교 입학제(고교 평준화)는 붕괴될 것임

* '07년 전체 고교 입학생의 1.57%에 불과한 특목고·자사고·국제고 학생은 고교 입학성적 상위 5%의 33.8%를 차지하였으며 '09년 서울대 합격생의 26.9%에 달함

- 특히 '자율성의 확보' 라는 부실한 명분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비의 3~4배를 받게 될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책임¹⁶⁾을 지는 방법은 현재 한국의 교육풍토에서 오직 명문대 입학 성적 이외는 없음

○ 문제는 이른바 SKY 대학의 입학정원은 1만 1,256명('06년)에 불과하여 '12년 이후 배출될 '귀족학교' 졸업생 83,700여명은 SKY 대학의 7.4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어 엄청난 학비에도 불과하고 그들 내부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더욱 고도화된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에도 특목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16.7%가 많은 81.5%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주당 평균 12.8시간을 투자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을 지출하고 있음¹⁷⁾

- 결국, 거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①더 가혹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②더 많은 학비를 부담하고 ③더 많은 사교육을 스스로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15% '귀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열패감 속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진출을 포기하거나 '귀족학교' 학생들의 경쟁구도를 능가하는 초고도화된 사교육 시장의 소비자로 희생되는 양분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임

16)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을 갖되, 그 책무성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담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모형'이다.

17) 중앙일보, '09년 2월 24일.

〈2008년 주요 고등학교 1년간 학비 현황〉

(단위 : %)

학교명	수익자 부담 교육비							학비			기타	계
	기숙사비	수학여행경비	학생수련비	학교급식	특기비적성교육비	졸업앨범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수험료		
민족사관고	5,370,430	3,375,000	61,070	2,301,610	2,806,850	120,000	726,000	2,451,600	38,400	1,214,000	1,478,250	19,943,210
부산국제고	1,080,000	541,000	28,680	1,223,000	390,000	38,080	324,000	4,200,000	300,000	2,500	0	8,127,260
서울과학고	337,500	2,015,360	38,000	2,273,400	176,994	85,000	840,000	1,450,800	14,100	10,000	128,750	7,369,904
대원외고	0	254,000	0	594,480	841,000	63,000	336,000	4,618,800	400,000	30,900	33,100	7,171,280
공립고 평균	750,471	196,264	47,195	678,474	299,734	38,339	247,223	1,146,938	15,107	6,706	81,356	3,184,716
사립고 평균	836,870	237,438	60,417	695,885	319,736	43,856	248,657	1,122,211	14,932	5,418	74,333	3,482,852

* 자료 : 정두언 의원실, 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08년 10월 7일.

□ 한편, 이러한 망국적 경쟁구조가 부활하게 된 이면에는 정부 간접 배제와 경영 효율화,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같이 사학재단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퇴행적 기대가 존재

○ '08년 현재 사립고는 총 655개교이며 일반고 94.4%, 특목고 5.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바 입시 명문고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5개교로 3.8%를 차지함.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말에는 자사고 100개와 소수의 외고와 국제고가 신설되어 입시 명문고의 비중이 20% 가까이 급등할 것임

〈2008년 사립 고등학교 현황〉

구분	일반고				특목고					총계
	일반고	자율고	자사고	소계	외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소계	
학교수 (%)	575 (93.0)	37 (6.0)	6 (1.0)	618 (94.4)	18 (48.6)	17 (46.0)	1 (2.7)	1 (2.7)	37 (5.6)	655 (100)
학생수 (%)	604,292 (97.1)	12,652 (2.0)	5,137 (0.9)	622,081 (95)	19,053 (58.6)	12,998 (40.1)	119 (0.4)	280 (0.9)	32,450 (5.0)	654,531 (100)

- 더구나 사립학교들은 자사고 설립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평균 24억원)을 포기하게 되지만 대신 학교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등록금을 3배 이상 인상할 수 있으므로 재정 자율권이 대폭 강화되는 것임¹⁸⁾

○ 결국, ①학교 선택권 보장, ②수월성 교육의 강화, ③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 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74년 무시험 고교 입학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의 간접 배제와 함께 상위 15% 이내의 우수 학생들을 선별하여 공급하는 안정적인 공급자 중심의 수익모델에 불과한 것임

- 그리고 이 같은 '공급자를 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라는 우리 교육의 치명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고교 등록금의 3배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를 양산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자녀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18) 등록금을 현재 수준의 3배 수준으로 자율화하고 대신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일만한 사립 학교수는 약 121개 정도로 추정된다. 김흥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방안 및 과제」 '08년 10월 1일, p. 16.

Ⅲ. 예고된 실패 :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전망

1. 최악의 재정적자 : 지방교육재정의 붕괴 가능성

□ '08년 12월 5일,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과 교육행정의 황폐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9년에만 16조 원, 향후 5년간 총 91.6조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감세를 단행

○ 더구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하가 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3%의 허황된 성장률에 기초한 재정계획도 엄청난 적자가 불가피함. 결국, '09년 국가재정은 감세 16조원, 세수 부족 10조원, 추경예산 30~40조원¹⁹⁾ 등 60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감세정책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²⁰⁾〉

(단위 : 억원)

연도	총 국세 감세액	내국세 감세액	보통·특별 교육 교부금 감소액	교육세 감소액	지방교육교부금 감소액 합계
2008	61,580	39,160	7,832	1,590	9,422
2009	124,960	88,090	17,618	350	17,968
2010	221,070	168,340	33,668	1,370	35,038
2011	254,150	194,710	38,942	2,090	41,032
2012	255,080	195,640	39,128	2,090	41,218
합계	916,840	685,940	137,188	7,490	144,678

* 주) 지방교육재정 보통 교부금은 교육세+내국세 20%의 96%로 구성되며 특별 교부금은 내국세 20%의 나머지 4%로 구성됨

19) 한나라당 안경울 사무총장은 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수정예산안(추경)은 30조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윤중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여당 사무총장의 자존심을 안다치게 하겠다고 언급. 아시아경제, '09년 2월 27일.

20) 홍헌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 재단법인 광장, 계간광장 제2호(2009년 신년호), p. 38.

-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감세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지방재정과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은 '09년 5.7조원, 향후 5년간 42.1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특히 지방교육 예산에 파국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09년 1.8조원, '10년 3.5조원 등 현 정부 5년간 총 14.4조원의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허물어 질 것으로 우려됨
 - 14.4조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향후 5년간 교육사업비(3.5조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며 충청남도 교육청의 5년간 총 예산(11.6조원) 보다도 많은 규모로 지방 교육청의 교육사업들은 중단이나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 이미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의 '09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70,6억원으로 '08년 90,3억원에 비해 21.8%나 축소되었음²¹⁾
- 한편, 이명박 정부는 '경쟁지상주의'와 평준화 해체 추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듯 12월 17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17.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장밋빛 구상을 발표²²⁾
 - * 주요 사업은 중학교 무상교육(0.6조원), 급식비 지원(2조억원), 무상 장학금 지원(5.4조원), 방과후학교 활성화(1.3조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지원(0.5조원) 등임
 - 그러나 이 대책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08년 7월 교육재정부가 발표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²³⁾과 비교해 볼 때, '09년 교육사업비의 57.3%, '10년 65.4%, '11년 61.9% 등 전체 **교육사업비 예산의 평균 61.5%**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임

21) 부산일보, '09년 1월 8일자.

22)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08년 12월 17일.

23) 교육과학기술부, 「2007-2012 중기 지방교육 재정계획」, '08년 7월.

- 더구나 예산의 57%인 9.8조원을 지방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혀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교육청에게 정책의 책임소재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추진 의지 자체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음

* 현재 지방교육청의 예산구조는 경직성 경비(인건비·학교운영비·교육행정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복지 투자를 추진할 교육사업비는 11% 수준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투자 구상〉

(단위 : 억원)

재원	'08	'09	'10	'11	'12	합계
국고	7,173	7,956	12,403	13,187	16,362	57,081
특별교부금	2,208	1,545	1,259	700	558	6,270
지방비 (%)	16,639 (56.6%)	17,562 (61.5%)	20,017 (56.7%)	19,933 (55.6%)	24,007 (55.6%)	98,158 (57.0%)
기타	3,383	1,500	1,600	2,023	2,224	10,730
소계	29,403	28,563	35,279	35,843	43,151	172,23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09년 12월 17일.

2. 학별구조의 공고화를 초래할 2010년 교육감 선거

□ 전시성 행정의 난무와 교육 주체간 무한 경쟁의 확산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조치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 시도 교육청 단위, 각급 학교단위의 무한 경쟁을 촉발하여 **비생산적인 전시행정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
 - 특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특목고와 일반계고 간 서열화가 본격화되면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대입성적 향상**과 영어능력 제고 등 소수의 성과지향 사업을 위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영어 교육관련 예산은 '07년 13억원에서 '08년 30억원, '09년에는 86억원을 배정하는 등 2년 사이에 7배 가까이 폭증
 - 각급 학교단위에서는 명문대 진학률, 학습부진 학생 비율, 교내 폭력사건의 발생 건수 등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통계의 왜곡,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편파적 지원 등 **비교육적 행태**가 만연될 우려도 존재
 - 이는 결국, 서울 등 자체 재원이 풍부한 지역과 기타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 교육의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 '09년 서울 강남교육청에 대한 지자체(강남구·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10억원이며 충남 논산교육청은 22억원에 불과함
- '10년 지자체·교육감 선거는 **교육특구 지정, 외국인학교·특목고 유치, 영어마을 건설** 등 영어 교육에 대한 **과다한 투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 학교·학생에 대한 **편파적 예산 지원** 등 학별구조를 공고화하고 교육의 서열화를 초래할 **비교육적 전시성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음

- * '09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관련 특구는 국제화교육특구(순천·아산·서울 노원구), 외국어교육특구(창녕·인천 서구, 거창·강진), 글로벌인재양성특구(영주시) 등 15개에 달함
- 결국 이러한 1%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무리한 경쟁과 중복투자**는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비용의 축소 등 교육 투자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IV. 결론 및 제언

□ 단기 성과주의의 극복과 선거용 교육구호의 재검토

○ 교육정책은 '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 현재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할 정도로 한번 확정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장기간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로 이미 결정된 정책은 변경이 대단히 곤란한 종합적인 정책분야임

- 따라서 지금은 ①교육세 폐지, ②모든 초중고에 영어체험시설 구축, ③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등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선거용 구호로 내걸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시스템 정비 등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 구축이 선행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12년까지 '전체 학생의 생활영어 구사'와 같이 비현실적이며 낭비적인 목표 보다는 10년, 20년 후의 영어 등 외국어 수요를 예측하여 그에 걸맞은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외국어 교육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

* '08년 기준 한국 초·중·고생의 55.6%가 영어와 관련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사교육비 20조원의 30.5%인 6조 1,283억원을 영어교육에 지출

□ 입학사정관 제도의 안착과 내신의 신뢰성 제고 등 입시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주체간 사회적 합의의 추진

○ 한국의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이 절대적 과제이며 특히 소수 명문대의 '성적 우수자 선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대책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①대학의 특성화와 이에 기초한 대입 제도의 다양화, ②입학사정관

제도 등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 ③고교 내신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엄정한 제도 준수 등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와 교육청 등 초·중등 교육 주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

- 특히 '교육의 시장화'에 따른 불필요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 폭등, 수능과목 이외 교과과의 황폐화, 방과후학교까지 가세한 과도한 교과 운영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교육 중시 풍토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중요

□ 평준화와 수월성을 뛰어넘는 교육철학의 재정립

○ '74년 고교 무시험 전형(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래 교육 현장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쟁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음

- 그러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한계, 학생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유발하는 학업성취도의 차이 등 실제 교육 현실 보다는 진보 또는 보수적 처방을 통한 교육의 일대 혁신 등 이념화되고 피상적인 논쟁이 주류를 차지
- 앞서도 논의했듯이 수월성의 개념은 특정한 우수 학생들의 분류와 이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현재 상태 보다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개념임
- 따라서 혁신적인 처방 보다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와 초중등 교육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는 교육성과의 지표 마련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교육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 한국 사회는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였음에도 무형적인 교육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 불과 1km에 1,500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철 건설비용은 쉽게 수궁하면서도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2만7천여명에게 연 2천8백억원을 투자하는 BK 21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보육비용의 국가 부담 증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인프라 투자,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의 양성과 투자확대 지원 등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곳, 재단법인 광장입니다

- 재단법인 <광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폭넓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든 국민의 풍요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현실에 기반한 진보적 정책 노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재단법인 <광장>은 민주화 운동 세력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 재단법인 <광장>은 한국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싱크탱크로 발전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장>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 후원회비 : 월 1만원 이상
 - 후원방법 : 은행 자동이체 또는 휴대전화 이체
 - 후원회원 특전
 - 격주 발행되는 agora issue briefing 제공 / 계간지 <광장> 정기구독
 - 재단법인 <광장>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강연회 우선 초청
 - 후원회원 신청
 - 홈페이지(www.agroa4u.org)의 회원가입 메뉴 또는 후원 신청 메뉴
 - 다음의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780-6618)로 전송
 - 다음 계좌에 자동이체 신청후 아래 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전화(02-780-6616) 또는 이메일(agora4u@agora4u.org)로 회원가입 신청
- △ 농협 : 083-01-348216 (예금주 : 재단법인 광장)
△ 국민은행 : 926101-01-070723 (예금주 : 재단법인 광장)

(후원) 회원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동의서

재단법인 광장 귀중

신 청 인 정 보			
성 명(단체명)		이 메 일	
전 화 번 호		출금일자 (선 택)	<input type="checkbox"/> 5일 / <input type="checkbox"/> 15일 / <input type="checkbox"/> 25일
휴 대 번 호			
주 소			

계 좌 정 보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주민등록 번호	
월 납입액	금		원(W)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재)광장과 CMS출금이체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인이 제공한 위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며, (재)광장의 그 활동에 공감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성명)

재 단 법 인 광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
빌딩 401호 재단법인 광장
TEL. 02-780-6616 / FAX. 02-780-6618